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8.25.(화) 8월 4주차 (제26-47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관세) 美·캐나다 관세협상 결렬 및 對캐나다 50% 추가관세 발효 ····· 2
• (수출통제) 트럼프 행정부,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수출통제 완화 추진 ····· 7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트럼프 행정부, 對中 '과잉생산 관세' 7.5% 부과 검토 중 ····· 10
• (제재) 美, 대이란 '경제적 고립 작전' 개시…2차 제재 확대 ····· 11
• (비자) 美 국토안보부, H-1B 비자 10만 달러 이상 수수료 제도화 추진 ····· 12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의회 휴회 ····· 13
• (행사) WIA, Center for Inclusive Democracy 행사 2건 ····· 13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4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5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8.26(수)	•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2차 추정치(2nd estimate GDP) 발표
8.27(목)	• 7월 미국 상품 무역수지 잠정치(Advance U.S. Trade Balance in Goods) 발표
8.28(금)	• 미 연준 케빈 워시 의장 경제 정책 연설(Federal Reserve Chair Kevin Warsh speaks)
9.1(화)	• 8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US Manufacturing PMI) 발표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관세) 美·캐나다 관세협상 결렬 및 對캐나다 50% 추가관세 발효

- 美, 약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수입품에 제338조 50% 추가관세 부과(8.22)
- 자동차·철강은 적용 제외됐으나, '27.1월부터 관련 관세를 50%로 인상할 방침 예고
- 캐나다도 對美 보복관세로 대응, 북미 공급망 및 USMCA 통상 불확실성 확대 전망

1. 개요

□ **美·캐나다 관세협상 결렬, 對캐나다 50% 추가관세 발효(8.22)**

• **양국 간 관세협상 결렬에 따라 미국은 8.22일 0시 1분(美 동부시간)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추가관세 부과**

-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구매·유통·판매 제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체계 △유제품 TRQ 배분방식 등을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판단,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시행

- 당초 8.19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협상을 위해 8.22일까지 일시 유예됐으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발효 직전 통관 지침을 통해 세부 적용 기준 제시

□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산 자동차·부품·철강 관세 50%로 인상 예고**

•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이후인 8.24일 캐나다산 자동차·트럭·자동차부품 및 철강에 대한 관세를 '27.1.1일부터 50%로 인상할 방침 발표**

-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에는 제232조에 따른 25% 관세가 적용되며, USMCA 적격 자동차·부품에는 미국산 함량 등을 고려한 별도 관세기준 적용

- 동 관세 인상 방침은 8.22일 발효된 제338조 추가관세와는 별개의 조치 예고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예외 및 시행 방식 등은 후속 조치 확인 필요

2. 美·캐나다 교역 규모 및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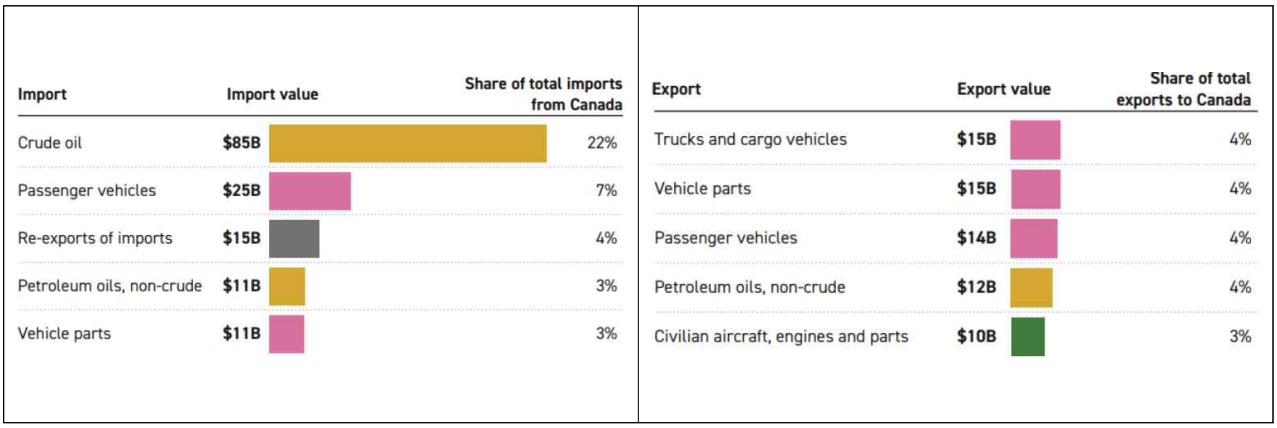
□ '25년 美·캐나다 상품교역 7,155억 달러, 에너지·자동차 중심 상호의존도 형성

- **'25년 미국의 對캐나다 상품교역은 수출 3,336억 달러, 수입 3,819억 달러 등 총 7,155억 달러로, 에너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연계성 유지**

- **(수입)** 원유 850억 달러(22%), 승용차 250억 달러(7%), 석유제품 110억 달러(3%), 자동차부품 110억 달러(3%) 등 에너지·자동차 관련 품목이 주요 비중 차지

- **(수출)** 트럭·화물차 및 자동차부품 각 150억 달러(각 4%), 승용차 140억 달러(4%), 석유제품 120억 달러(4%), 민간항공기·엔진·부품 100억 달러(3%) 등 자동차·에너지·항공 관련 품목 중심

〈2025년 미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입 품목〉



[자료] U.S. Census Bureau; Politico Pro Analysis (2026.8.20)

3. 관세법 제338조 발동 배경 및 비관세 쟁점

□ 주류·유제품·자동차 관련 차별적 조치를 제338조 발동 근거로 제시

- **미국은 캐나다의 주류 판매 제한, 유제품 TRQ 배분 및 자동차 관세·TRQ 운영을 對美 차별조치로 판단, 관세법 제338조 발동 근거로 제시**

- **(주류)** 캐나다 주·준주의 미국산 주류 구매·유통·판매 제한이 여타국 제품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미국산 제품을 차별한다고 판단

- **(유제품)** USMCA 상 미국산 치즈 TRQ의 소매업체 할당 참여를 제한한 반면,

CETA* 상 EU산에는 이를 허용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장접근 조건 적용

*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및 업체별 TRQ를 적용해 여타국 대비 불리하게 취급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접근을 제한한다고 판단

□ 국내 산업·문화정책으로 협상 쟁점 확대, 양국 간 이견 심화

• 자동차·철강 관세를 중심으로 진행된 협상이 낙농·주류 및 프랑스어·문화 보호 등 캐나다 국내 정책까지 확대되면서 합의 도출 난항

- **(미국)** 낙농 공급 관리,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및 프랑스어·문화 보호 등 캐나다 국내 정책까지 협상 쟁점으로 제기

-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보복관세 철회와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 등을 제시한 반면, 공급관리제도와 프랑스어·문화 보호정책은 유지한다는 입장 견지

4. 관세법 제338조 추가관세 주요 내용

□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수입품에 제338조 50% 추가관세 적용

• 미국은 8.22일부터 '25년 기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추가관세 부과 (전체 對캐나다 상품수입의 약 5% 수준)

- **(대상 품목)** CBP 지침에 따라 주류·유제품을 비롯해 농식품·화학·플라스틱·목재·종이·섬유·기계·전자·가구 등 HTSUS 9903.03.12~9903.03.14 지정 품목에 50% 추가관세 적용

- **(USMCA)** USMCA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338조 지정 품목에 50% 추가관세 적용

* 제338조 추가관세는 기존에 적용되는 반덤핑·상계관세 및 기타 관세·세금 등과 별도 부과

□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은 제338조 50% 추가관세 적용 제외

• 자동차·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조치 대상과 민간항공기 등에는 제338조 추가관세율 0% 적용

- **(주요 제외품목)**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일부 파생제품, 자동차·부품, 중·대형 차량·부품, 목재제품, 반도체, 특허의약품 등에 제338조 추가관세율 0% 적용 (HTSUS 9903.03.15)

- **(기존 관세 적용)** 자동차·철강 등에는 제338조 50% 추가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기존 품목별 관세조치 별도 적용

- **(민간항공기)** 캐나다산 민간항공기·엔진·부품 및 지상 비행시뮬레이터 등에는 제338조 추가관세율 0% 적용(HTSUS 9903.03.16)

〈美 관세법 제338조 對캐나다 추가관세 적용 현황〉

HTSUS	추가관세율	주요 대상
9903.03.12	50%	주류, 일부 목재·종이·스포츠용품 등
9903.03.13	50%	유제품 및 관련 제품
9903.03.14	50%	농식품·화학·플라스틱·목재·섬유·기계·전자·가구 등
9903.03.15	0%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부품, 목재, 반도체, 특허의약품 등
9903.03.16	0%	민간항공기·엔진·부품 등

[자료]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9606660; Section 338-Canada HTS List

• 트럼프 대통령은 8.24일 캐나다산 자동차·트럭·자동차부품 및 철강 관세를 '27.1.1일부터 50%로 인상할 방침을 별도 예고

5. 현지 반응

□ (캐나다 정부) 對美 보복관세 시행 및 교역 다변화 등 대응 강화

• 캐나다 정부는 9.8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5~50%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對美 의존도 완화를 위한 교역 다변화 추진

- 철강·알루미늄, 수산물, 의류, 가전·전자제품 등 700여 개 미국산 품목을 대상으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피해 기업·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내 지원책 모색

- 카니 총리는 기존 美·캐나다 교역 관계의 복원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국내 산업기반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 제시

□ (산업계) 자동차 고율 관세에 따른 북미 공급망 차질 및 비용 상승 우려

• **자동차 업계는 미·캐나다 간 높은 공급망 연계성을 감안할 때, 50%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생산비용 상승 및 생산 차질 가능성 우려**

- 차종별 계약·금형·생산설비가 기존 공급망에 연계돼 있어 단기간 내 대체 조달 및 생산 거점 전환이 제한적이라는 평가 우세

- 고율 관세 장기화 시 美 완성차업체의 조달 비용 상승과 생산 차질을 통해 북미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제기

□ (싱크탱크) 제338조 관세에 따른 USMCA 신뢰도 및 북미 경쟁력 약화 우려

• **주요 싱크탱크는 對캐나다 고율 관세로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공급망·소비자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CSIS는 USMCA 적격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협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북미 통합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 지적

- PIIE는 50% 관세가 美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북미 공급망의 높은 연계성으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제기

□ (향후 전망) 자동차·철강 관세 추가 예고로 통상 불확실성 지속

• **'27.1.1일로 예고된 자동차·부품·철강 50% 관세는 협상 재개를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나, 양국의 관세 대응 확대로 통상 불확실성 지속 전망**

- 협상 결렬 전 자동차 관세를 25%→15%,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25%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중·대형 트럭 등 이견으로 합의 결렬

- 향후 ① 9.8일 캐나다 보복관세 시행 및 미국의 추가 관세·비관세 대응 여부 ② '27.1월 자동차·부품·철강 50% 관세 관련 후속 조치 ③ 양국 협상 재개 및 USMCA 후속 협의 등을 중심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CBP(8.21), 인사이드(8.24)(8.22), International Trade Today(8.24) 등 현지 언론 종합

(수출통제) 트럼프 행정부,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수출통제 완화 추진

- 백악관, 국가안보 과학·기술전략을 통해 상무부의 수출통제 완화·간소화 방침 공식화
- 드론·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동맹국 대상 수출 절차 완화 추진
- CFIUS 투자심사 범위는 확대하는 반면, 대중 해외 투자 제한은 강화

1. 개 요

□ 백악관, 「국가안보 과학기술 전략(National Security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보고서 발간(8.19)

•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혁신·경쟁력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수출 통제를 폐지·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방침 표명

- 미국 기업의 혁신·경쟁력·국제 협업·신흥기술 확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와 신흥 위험 대응을 위한 통제 최신화 방향성 병존

□ 트럼프 행정부, 수출통제 전반을 완화하며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노력

• 바이든 행정부 말기 발표된 소위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은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미국 혁신을 저해한다며 집행 거부

- 트럼프 행정부는 동 규칙을 정식 폐지하고 조만간 보다 완화된 대체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UAE 대상 수출통제 완화로 미국 기술의 UAE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조치 발표. 주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안보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비판 제기

2. 상 세

□ 수출통제 규제완화: '저위험 완화·고위험 집중'의 구조적 재편

• BIS는 동맹국 대상 무인기 수출통제 간소화 등을 통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 추진

- ’26년 1월 발표된 임시 최종규칙은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참여국에 상업용 드론(최대 비행시간 1시간 미만, 광범위 해외 가용성 보유) 수출을 허용하는 등 기술 확산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유연성 확보

• BIS 2027 회계연도 예산요청은 기관 조직을 간소화해 국가안보 핵심 기술에 역량 집중 방침 명시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는 적대국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우선 적용하되, 그 외 불필요한 수출허가 요건은 폐지할 방침
- BIS 인력을 고위험 거래 심사에 재배치해 한정된 자원을 수출통제 효과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

□ CFIUS 현대화 : 동맹국 투자심사 완화와 핵심기술 분야 관할 확대 병행

• 재무부 주관의 CFIUS를 현대화·강화하는 방안 명시(‘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25.2)에 근거)

- CFIUS가 외국인투자 심사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투자의 잠재적 군사·안보 활용 가능성과 미국의 혁신·회복탄력성·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방침

• CFIUS 관할을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까지 확대 추진

- 현행 CFIUS 관할에서 제외되는 그린필드 투자 중 국가안보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별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
- 미국의 적대국과 협력하지 않는 동맹국·파트너국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는 적극 유치·촉진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방침

• 미국의 대외투자(outbound) 규제는 확대 방침

- ‘2025년 종합 대외투자 국가안보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에 따라 재무부가 AI·양자·반도체·슈퍼컴퓨터·극초음속 기술 분야에 대한 대외투자 제한을 구체화할 방침
- 중국 군민융합 전략과 연관된 추가 분야로 대외투자 규제 확대 예정

- 동맹국·파트너국이 미국과 유사한 대외투자 제한 정책을 도입시, 적대국의 부당 관행과 명확히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3. 시사점

□ '수출통제 완화 기대'와 '중국 연계 첨단기술 심사 강화' 동시 작용

• 동맹·저위험 품목 중심 완화로 한국 기업의 美국산 첨단기술 조달·재수출·제3국 협업 관련 허가 부담 완화 가능성

- 다만, 'AI 확산 규칙' 폐지 이후 대체 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AI 반도체 및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CFIUS 강화 및 대외투자 규제 확대는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기술협력, 중국 연계 프로젝트 환경을 변화시킬 요인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CFIUS 심사에서 우호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도체·AI·배터리·데이터센터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시 소유구조와 중국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대외투자 규제는 미국 자본과 미국인의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직접 규율하지만, 미국 투자자가 참여한 합작법인(JV)이나 중국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James Lee
▪ 자료원	인사이드(8.19), 백악관(2.21), 연방관보(7.14), NSSTS(2026.8)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트럼프 행정부, 對中 '과잉생산 관세' 7.5% 부과 검토 중

• **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생산능력 관련 301조 관세 7.5%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8.24)**

-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9.24)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7.5% 부과를 검토 중*이며, 회담 이전 발표할 가능성 보도**
- USTR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 관련 한국 포함 중국, 일본, EU, 멕시코, 대만, 베트남,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26.3.11)

-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 높은 관세율 발표 후 일부를 유예해 실효세율 7.5%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이며, 최종 관세율·유예 대상·기간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언급*

* 11월 10일에 만료될 예정인 1년간의 무역전쟁 휴전 연장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

- 對中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7.5%로 확정될 경우,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중첩되어, 트럼프 2기 신규 對中 관세율은 약 20% 수준* 에 이를 전망

*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트럼프 2기 펜타닐 관련 IEEPA 관세(20%)와 동일한 수준

-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강화하되, 미·중 무역전쟁 휴전 범위를 넘어서는 갈등 확대는 자제하려는 의도로 평가

-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 계획 질문에 공식 입장은 행정부가 직접 발표할 사안이며, 현재 언론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

▪ 자료원 | 블룸버그(8.24)

(제재) 美, 대이란 '경제적 고립 작전' 개시…2차 제재 확대

- **미 재무부는 이란의 국제 경제·금융 연결망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제재 캠페인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8.24)**

- 행정명령 제13902호*에 따라 이란의 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권한을 확대

* 이란의 건설·광업·제조·섬유 부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20.1월 행정명령

- 재무부·국무부 등 유관부처는 각국 정부에 미국이 파악한 이란 관련 거래를 정해진 기한 내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미이행 시 제재할 방침

-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기업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란 국영 멜리은행(Bank Melli Iran)의 모든 해외 지점 폐쇄를 촉구

- **이란 관련 기업·개인·선박 약 60개를 제재하고 일반허가 5건을 중단**

- 주요 제재 대상은 ▲핵·미사일 기술 조달망 ▲이란 정보안보부가 지휘하는 사이버 조직 ▲해외 각지의 이란산 원유 중개업체·그림자 선박 네트워크

- 비상업적 개인송금과 교육·학술·회의·스포츠 교류 관련 일반허가 5건*을 무기한 중단하고, 이란 측 호르무즈해협 통항료 지급·보험 이용에 따른 제재 위험도 경고

* 기존 허가에 따른 거래 정리는 9.8까지 허용

- **(반응) 對中 제재 집행과 국제공조가 대이란 압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평가**

- 구체적인 제재 대상국과 시행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번 제재명단에도 이란산 원유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로이터)

-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이번 조치가 중국의 주요 은행·대기업을 직접 겨냥하지 않아 압박 강도가 제한적이라고 분석(WSJ)

- 미국의 기존 대이란 2차 제재는 집행이 제한적이었다며, 서방 동맹국의 참여와 중국·러시아 등 주요 교역국 대상 제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악시오스)

▪ 자료원 | 재무부(8.24), 로이터(8.24), 월스트리트저널(8.25), 악시오스(8.24)

(비자) 美 국토안보부, H-1B 비자 10만 달러 이상 수수료 제도화 추진

- **국토안보부(DHS)는 신규 H-1B 비자에 10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관보에 게재, 지난해 한시 도입한 10만 달러 수수료의 제도화를 추진**

- 기존 H-1B 수수료 대비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연간 쿼터 대상 약 8만 5천 건의 청원에 적용해 연간 약 88억 달러의 재원 확보를 추산

- 지난해 조치와 달리 미국 내 체류자를 포함한 연간 쿼터 대상 H1-B 청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병원 등 쿼터 면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업계 등은 높은 수수료의 비용 부담과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반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최종 시행 가능성 주목**

- 미국 상공회의소는 높은 수수료가 특히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고숙련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하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 지난해 도입된 10만 달러 H1-B 수수료는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 후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정부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규정안도 최종 확정 시 법적 분쟁 가능성 제기

〈美 H1-B 비자 수수료 주요 내용〉

구분	2025년 대통령 포고문	2026년 DHS 관보
형태	대통령 포고문	DHS 관보에 규정안 게재
수수료	10만 달러	103,265달러
주요 대상	미국 외부에 있는 신규 H1-B 근로자	연간 쿼터 대상 H-1B 청원 근로자
시기	'25.9.21부터 12개월간 한시 적용	'26.8.25 관보 게재, 최종 시행 시기 미정
재판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 진행 중	현재 관련 재판 없음.

[자료: 美 백악관 대통령 포고문("25.9.19), 美 국토안보부(DHS) 연방관보 규정안]

▪ 자료원 | 로이터(8.24), NYT(8.24)

의회법안 동향

* 의회 휴회로 특이 동향 없음.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Wireless Infrastructure Association (WIA)	9/1(화) 12:00 pm	〈Satellite Direct-to-Device: Promise, Reality, and the Future of Connectivity〉 ▪ 위성 직접 연결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업계는 위성 연결이 미래 무선 네트워크를 어떻게 변화할지 논의	링크
Center for Inclusive Democracy	9/2(수) 10:00 am	〈The Battle for Control of Congress and the Impact of the State Redistricting Wars〉 ▪ 의회 통제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과 주(州) 선거구 재구획 분쟁의 중간선거 영향 논의	링크

* 8월 25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 Administration Prepares to Revoke Up to 200,000 Visas From Asylum Seekers (트럼프 행정부, 망명 신청자 최대 20만 명 비자 취소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B-1·B-2 비자를 전수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치를 추진 중
The Washington Post	Nevada sues over federally mandated reduction in Colorado River water use (네바다주, 연방정부의 콜로라도강 물 사용 감축 명령에 소송)
	네바다주는 콜로라도강 고갈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물 사용 감축 계획이 법을 위반하고 경제·환경·보건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
The New York Times	Trump Lawyers Warn That Kennedy Center Might Need Demolition if Not Fixed (트럼프 행정부, 케네디센터 보수공사 무산 시 철거 가능성 경고)
	트럼프 행정부는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케네디센터 보수공사를 법원에서 옹호하며, 공사가 무산되면 건물이 안전 문제로 철거되고 포토맥강변 야외극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
CNN	New York City minority business owners sue Mamdani in bid to stop city-run grocery store plan (뉴욕 소수인종 식료품점주 단체, 시영 식료품점 계획 중단 소송)
	뉴욕시 소수인종 식료품점주들을 대변하는 다문화기업연합은 시영 식료품점 5곳이 주요 생필품을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면 영세업체가 경쟁하기 어렵다며 해당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
Reuters	Amazon plans drone delivery expansion to about 500 US locales (아마존, 美 드론 배송 지역 약 500곳으로 확대)
	아마존은 지역별 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재 11개 거점에서 운영 중인 드론 배송 서비스를 연말까지 미국 내 약 5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 미국 동부 시간 8월 25일 14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